

# 어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가?: 18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

조진만 | 인하대학교

## | 논문요약 |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대의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어떠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가의 문제를 18대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18대 총선에서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현역의원 만족도, 정당친밀감, 이념,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 I. 서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당, 후보자, 정책 등의 문제를 둘러싼 공정하고 경쟁적인 설득의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서 경쟁적인 설득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의 공적 토론과 숙의를 가능하게 한다(Button and Mattson 1999; Charney 1998; Fishkin 1991)는 점에서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공고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때 대의민주주의에서 설득의 과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된다(Caldeira *et al.* 1990; Schattschneider 1942). 즉 대의민주주의에서 각 정당은 정책, 소속 정치인, 당원 조직 등을 통하여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자원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통하여 치열한 설득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Hillygus 2005; Jackson 1997).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설득 내지는 동원과 관련한 정당의 고전적 역할이 전통적인 사회균열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탈물질주의적 가치 등이 대두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Dalton *et al.* 1984; Wattenberg 2002). 그리고 이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로 정당의 동원 능력 저하로 인한 투표율 하락과 당원—특히 활동적인 진성당원—수의 감소가 주로 지적된다(Gray and Caul 2000; Franklin 2004; Ware 1996).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쟁적인 설득의 과정이 과거와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즉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고전적 차원의 정당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요인들이 정치적 설득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Huckfeldt and Sprague 1992).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인과 활동가적 당원들이 주축이 되는 전통적인 형태의 정당 조직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지자들이 중심이 되는 개방적인 형태의 정당 조

직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지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정진민 2008).

한국의 경우 진성당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민주화 이후 규제적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통하여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가 지속적으로 제한받고 있다는 점(조진만 2006), 그리고 부동산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유권자 수준에서 정치적 설득과 관련한 선거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긴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정치적 설득과 관련한 선거운동의 문제는 주로 법·제도적 차원(강태수 2008; 김현태 2007; 김형준 2005; 이현출 2004; 임성학 2004)이나 정당과 후보자의 측면(강원택 2008; 신두철 2007; 한국정당학회 2004; 2008)에서 다루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그나마도 다른 연구주제와 비교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성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이것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나 다른 형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문제와 비교하여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18대 총선 직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를 분류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수행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유권자가 정치적 설득과 관련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유인과 논리들을 밝히고, 향후 한국이 정치적 참여·운동·공론화 등과 관련한 민주주의 공고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 II.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의 정립

대의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치문제에 대한 대중(*demos*)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관심과 참여의 문제는 체제의 대표성·정통성·안정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Powell 1982; Verba and Nie 1972).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의 투표 참여,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과 후보자의 동원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주된 초점을 맞추었을 뿐 유권자 차원에서 정치적 설득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선거운동에 대해서는—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상대적으로 미약한 관심을 보여왔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유권자 차원에서 정치적 설득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선거운동은 중요한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질적 수준과 공고화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참여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기존 연구의 주장들이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때 유권자의 선거운동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이다. 가장 쉬운 형태의 정치참여인 투표의 경우에도 합리적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투표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영점(*nil*)에 가깝다는 점에서 합리적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유인은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Ferejohn and Fiorina 1974). 그러므로 투표 참여의 유인조차도 갖지 못하는 합리적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가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합리적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운동도 전개하는 역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을 둘러싼 유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정치참여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Abramson and Aldrich 1982; Powell 1986; Riker and

Ordeshook 1968; 강경태 2003; 박찬욱 1992).

이것은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를 결정짓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객관적 확률보다는 유권자 스스로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내 한 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산출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특정 선거에서 유권자 한 표의 객관적인 가치는 동일하지만 각 유권자가 자신의 한 표가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의 경우 의식적으로 정책과 선거쟁점들에 대하여 무지한(*rationaly ignorant*) 행태를 보이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여 다른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파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가설 1〉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가설 2〉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투표결정을 내릴 때 회고적 차원의 보상(*reward*)과 처벌(*punishment*)의 기제는 유용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Fiorina 1981; Key 1966). 즉 현역의 대통령과 의원들이 재직 중 또는 임기 동안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었는가의 문제는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지지의 유지와 철회, 그리고 투표와 기권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Kernell 1977; Pierson 1975; 가상준 2005).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는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현역의원이 선거 이전 어떠한 성과를 보여주었는가의 문제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결정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의 국정운

영과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보상과 처벌의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연구가설을 정립하기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먼저 현실적인 이유로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설문조사 자료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범주 없이 만족과 불만족의 양 범주로 질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서 논의한 것처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와 비선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가설을 정립하여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중간범주 없이 양 범주로 나누어 파악할 경우 이들과 유권자 선거운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을 어떻게 적실성 있게 정립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 평가(보상)와 부정적 평가(처벌)가 모두 동일한 차원에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편적 이익에 대한 집단행동보다는 집약적 손해에 대한 집단행동이 보다 잘 나타난다(Peltzman 1976)는 점을 고려하면 보상보다는 처벌의 기제가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현역의원이 국정운영과 활동을 잘해서 유권자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은 보편적이고 미약한 반면 잘못해서 유권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집약적이고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가설 3〉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유권자의 경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가설 4〉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은 유권자의 경우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역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유권자와 정당 간의 관계이다. 특정 정당과 일체감 내지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정치참여를 많이 한다(Budge *et al.* 1976; Campbell *et al.* 1960; Finkel and Opp 1991)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특정 정당과 일체감 내지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 정당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과 그 정당이 지향하는 정책적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같은 유권자는 그 정당 또는 그 정당 소속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남다를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과 일체감 내지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는 그 정당에 대한 정보력과 지지도, 그리고 선거에서 그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욕구 등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연구가설 5〉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념은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평가된다(Ware 1996, 17). 이때 실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차원에서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의 문제는 유권자가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Downs 1957). 그리고 이것은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근접한 정당을 지지하고, 그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단순한 이념적 거리보다는 유권자의 이념적 강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Rabinowitz and Macdonald 1989). 진보(좌파)로부터 보수(우파)로 이어지는 일차원적인 이념적 스펙트럼하에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좌파) 정당이나 우파(보수) 정당 중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이념적 차원의 정치적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다수결원칙하에서 진보(좌파) 세력 또는 보수(우파) 세력 중 어느 한 세력도 정치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도적 유권자들의 중위선호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의사결정상에 반영이 되게 된다(McDonald and Budge 2005; McDonald *et al.* 2004). 즉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선거결과로 인한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인식과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연구가설 6〉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경우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거주지 규모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 적은 규모와 동질적 구성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도시 지역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 지역의 특성은 지역 내의 다양한 교류와 논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치참여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Millbrath and Goel 1977; 김옥 1999; 윤천주 1981). 반면 원자화된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거대한 도시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 내 다양한 인적 교류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기회도 자주 갖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결과 도시 지역의 정치참여 수준은 농촌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편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경우 근대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전근대적 동원투표(윤천주 1963)의 영향력이 잔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하여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선거와 관련한 논의를 지역 내에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와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위하여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가설 7〉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민주화 이후 실시된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특정 지역별로 지지하는 정당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균열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은 주민들 간의 동질성이 높고, 특정 정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토대로 높은 수준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 오히려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인다.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는 특정 정당의 독주와 승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선거 경쟁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때 일반적으로 정당과 후보자 차원의 선거운동은 선거경합도가 치열한 경우에 활발하게 진행된다(Cox and Munger 1989; 한정훈·강현구 2008)는 점을 고려하면 승리가 분명한 지역에서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도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할 유인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즉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역 내 유권자들 사이에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통하여 다른 유권자를 설득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이 지역 내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당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지역적 정서와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를 쉽게 호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연구가설 8〉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유권자와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

이 밖에 본 연구는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Lazarsfeld *et al.* 1948; Verba and Nie 1972;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소득수준, 교육수준, 성별, 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제변수들은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고,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관심·인지·관여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기존 연구의 주장들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이 선거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 III. 연구모델과 조작화

본 연구는 앞서 정립한 연구가설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일단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V_i$ 은 가변수로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그런 경우에는 1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종속변수를 코딩하였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독립변수들이 어떻게 조작화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모델: } V_i = & \alpha + \beta_1 * \text{정치효능감} + \beta_2 * \text{선거관심도} + \beta_3 * \text{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 & \beta_4 * \text{현역의원 만족도} + \beta_5 * \text{정당친밀감} + \beta_6 * \text{이념} + \beta_7 * \text{이념}^2 + \beta_8 * \text{중소도시} \\ & + \beta_9 * \text{대도시 교외} + \beta_{10} * \text{대도시} + \beta_{11} * \text{영남} + \beta_{12} * \text{호남} + \beta_{13} * \text{충청} + \beta_{14} * \text{강} \\ & \text{원} + \beta_{15} * \text{소득수준} + \beta_{16} * \text{교육수준} + \beta_{17} * \text{성별} + \beta_{18} * \text{연령} + \epsilon \end{aligned}$$

첫째, 정치효능감의 경우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설문을 조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누가 권력을 잡아도 별 차이가 없다” 1점으로부터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5점까지로 질문한 설문과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부터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5점까지로 질문한 설문을 조합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정치효능감은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 사이에 분포하게 되며, 그 점수가 높을수록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거관심도는 18대 총선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네 개의 항목으로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선거관심도의 경우 18대 총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로, “별로 없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로, “조금 있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3으로, 그리고 “매우 많았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4로 코딩하였다.

셋째,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업무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아주 잘못하고 있다+못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0으로, 그리고 “잘하고 있다(아주 잘하고 있다+잘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로 코딩하였다.

넷째, 현역의원 만족도는 지역구 현역의원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였다(전혀 만족하지 못하였다+별로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0으로, 그리고 “만족하였다(매우 만족하였다+대체로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1로 코딩하였다.

다섯째, 정당친밀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0으로,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하여 가깝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여섯째, 이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진보(좌파) 0점에서 보수(우파) 10점 사이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평가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앞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유권자의 이념과 선거운동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규정되어진다. 즉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와 비교하여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를 기준으로 할 때 좀더 이념적인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이념에 대한 2차의 다항식을 채택하여 두 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앞서 전개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모델에서 회귀계수  $\beta_6$ 은 음(-)의 값을, 그리고 회귀계수  $\beta_7$ 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Gujarati 1995, 217-221).

일곱째,  $\beta_8$ 부터  $\beta_{10}$ 까지 거주지 규모와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중소도시, 대도시 교외, 대도시에 해당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그리고 거주지역의 규모가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을 기준 변수로 설정하였다.

여덟째,  $\beta_{11}$ 부터  $\beta_{14}$ 까지 지역과 관련하여 설정한 독립변수들은 유권자의 현 거주지를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남, 호남, 충청, 강원외의 경우 유권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각각 코딩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 관련 독립변수들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기준 변수로 설정하였다.

아홉째, 소득수준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을 질문한 설문을 사용하여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1, 100만 원~149만 원=2, 150만 원~199만 원=3, 200만 원~249만 원=4, 250만 원~299만 원

=5,300만 원~349만 원=6,350만 원~399만 원=7,400만 원~449만 원=8,450만 원~499만 원=9,500만 원 이상=10으로 코딩하였다.

이 밖에 독립변수들의 경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재학 및 졸업=4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0과 여성=1로, 연령은 유권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 IV. 연구결과 분석

다음의 <표 1>은 앞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단 연구결과를 보았을 때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p=0.000$ )는 점은 본 연구의 모델이 적합도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모델은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를 설명함에 있어 84.0%의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정당친밀감, 이념<sup>2</sup>,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에서, 그리고 현역의원 만족도와 이념이 유의확률 0.1 이하 수준에서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밖의 독립변수들은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승산비(odds ratio)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그리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지적한 바 있듯이 유권자가 주관적으로 자신의 한 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여부가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과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의 경우 각

(표 1) 18대 총선 유권자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회귀계수(표준오차)	유의확률(p)	Exp( $\beta$ )
절편	-6.236(1.549)	0.000	0.002
정치효능감	0.284(0.086)	0.001	1.329
선거관심도	0.640(0.228)	0.005	1.896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0.441(0.331)	0.183	0.643
현역의원 만족도	-0.546(0.329)	0.097	0.579
정당친밀감	0.803(0.310)	0.009	2.232
이념	-0.408(0.211)	0.053	0.665
이념	0.037(0.019)	0.047	1.038
중소도시	-0.449(0.480)	0.350	0.639
대도시 교외	-0.143(0.597)	0.811	0.867
대도시	-0.144(0.470)	0.760	0.866
영남	0.392(0.352)	0.265	1.480
호남	0.510(0.588)	0.386	1.665
충청	0.742(0.461)	0.107	2.101
강원	-0.541(0.883)	0.540	0.582
소득수준	0.135(0.064)	0.034	1.145
교육수준	0.265(0.243)	0.277	1.303
성별	-0.626(0.301)	0.037	0.535
연령	0.000(0.012)	0.975	1.000
-2로그우도		344.915	
카이자승		101.603(유의확률=0.000)	
사례수		468	
적중률		84.0%	

정당의 정책이나 선거쟁점 등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여 다른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파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점도 시사한다. 특히 정치효능감(p=0.001)과 선거관심도(p=0.005)의 유의확률이 다른 독립변수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였다는 점은 이들 변수가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유권자들이 18대 총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의  $\text{Exp}(\beta)$ 는 0.643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18대 총선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확률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의 64%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현역의원 만족도의  $\text{Exp}(\beta)$ 는 0.57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18대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활동에 만족한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확률이 이에 불만을 가졌던 유권자들의 58%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승산비뿐만 아니라 유의확률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p=0.183$ )보다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평가( $p=0.097$ )가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18대 총선이었다는 점, 그리고 18대 총선의 경우 17대 대선 직후 밀월선거로 실시되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적 평가와 불만보다는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그것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의 선거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현역의원의 활동에 대한 처벌과 보상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고, 특히 보상보다는 처벌의 기제가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당친밀감의  $\text{Exp}(\beta)$ 는 2.232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18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당친밀감의 경우 유의확률이 0.01 이하 수준( $p=0.009$ )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18대 총선 유권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반증해준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특정 정당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그 정당에 대한 정

보력과 지지도, 그리고 선거에서 그 정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욕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이념의 경우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진보(좌파) 또는 보수(우파)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18대 총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산비와 유의확률을 고려할 때 18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text{Exp}(\beta)=0.665$ ,  $p=0.053$ )보다는 보수(우파)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text{Exp}(\beta)=1.038$ ,  $p=0.047$ )이 상대적으로 좀더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로 18대 총선 직전에 실시된 17대 대선에서 보수세력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어 보다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한 반면, 진보세력은 정권 상실감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향후 좀더 면밀한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중요한 점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경우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것은 앞서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논의한 바 있듯이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경우 중도적 성향의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거결과를 감수하는 데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Buchanan and Tullock 1962)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다섯째, 거주지 규모의 경우 중소도시, 대도시 교외, 대도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 모두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적게 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유의확률을 고려할 때 거주지 규모의 차이가 18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미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공동체적 의식이 약해졌다는 점,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전근대적 동원투표와 준봉투표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여섯째, 지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영남, 호남,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좀더 적

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의확률을 고려할 때 거주지의 차이가 18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 여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초 연구가설을 정립할 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선거경쟁도가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측하였는데, 이와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다음과 같은 18대 총선의 선거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즉 영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친박연대가 구성되어 한나라당 후보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다는 점에서, 호남 지역의 경우 진보세력의 지역적 맹주로서 정권 교체에 따른 위기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충청 지역의 경우 자유선진당의 출현으로 인하여 더욱 경쟁적인 선거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역 거주 유권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강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의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남, 호남, 충청 지역과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특별한 선거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지역 거주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을 적게 한 경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도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동과 접촉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선거경합도가 낮은 자신의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갔을 경우 또는 다른 지역 유권자가 자신의 지역에 왔을 경우에는 더욱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같은 가능성은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현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정하였던 통제변수들 중 소득수준( $p=0.034$ )과 성별( $p=0.037$ )이 유의확률 0.05 이하 수준에서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연령은 18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득수준이 높은 유권자의 경우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효능감이 높다는 점, 사회경제적 지위도 높다는 점, 그리고 생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유권자와 비교하여 남성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하여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확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 $\text{Exp}(\beta)=0.535$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이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교육수준의 경우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18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 경향을 보였지만 이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대화 이후 한국 사회의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한편 연령의 경우 18대 총선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단계에서 이것이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 부각되고 있는 세대효과(강원택 2003, 256-333; 정진민 2008, 59-83; 최준영·조진만 2006)로 인한 코호트(*cohort*) 세대 내 선거운동의 활성화가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의 경우 일반적인 투표 참여에 적용되는 논리와는 차별화된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면밀한 차원에서의 논의와 분석이 요구된다.

## IV. 결론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고, 이것이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투표나 다른 형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 문제와 비교하여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라고 설득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18대 총선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18대 총선에서 정치효능감, 선거관심도, 현역의원 만족도, 정당친밀감, 이념,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안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민주화 이후 참여 부족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최장집 2002)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치적 효능감과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과 관심도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모색은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정치적 공론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의 선거에서 대통령과 현역의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처벌의 기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현역의원의 업무수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 단순히 이들에 대한 지지 철회의 수준을 넘어서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선거에서 책임정치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현역의원들은 항상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된 유권자들이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간과하지 말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념은 유권자의 투표결정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에게 있어 선거는 단순히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념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의 이념적 입장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와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식이 부족할 경우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매우 첨예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정당이 유권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설문조사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친밀감의 강도가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유권자가 특정 정당과 단순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유권자와 비교하여 두 배 이상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정당이 진성의 활동가들을 규합하는 것 이상으로 포괄적인 지지자를 확산하는 작업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오늘날 지나치게 규제적 정치관계법으로 인하여 정당의 활동이 상당 수준 위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규제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정치적 참여와 공론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요구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다섯째, 거주지 규모가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농촌 지역에서의 전근대적 동원투표와 준봉투표의 영향력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반증해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지역주의와 유권자의 선거운동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좀더 세부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설문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었지만 지역주의가 존재하는 곳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지역 내외에서 전개하는 선거운동이 차이를 보이는지, 지역 내 주민들과 타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차이

를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째,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남성 유권자들과 비교하여 선거운동을 할 확률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별에 따른 정치적 대표성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여성의 정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인 수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 수준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의 선거에서 세대효과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연령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나온 원인과 관련하여 코호트(*cohort*)로 구분된 세대 간 선거운동이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선거운동과 연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와 분석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5. “대통령 지지율과 2004년 대통령선거: 1952-2000년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153-174.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 91-111.
- 강태수. 2008.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계헌법연구』 제14권 2호: 1-28.
- 김경호. 2008. “정치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2호: 5-50.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8. “정당, 후보자와 선거운동: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제13권 1호: 189-214.
- 김 옥. 1999. “거주지 규모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 김현태. 2007. 『한국의 선거운동제도와 정치발전: 자유, 공정,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오름.
- 김형준. 2005. “한국 선거제도의 선거운동 영향력 고찰.”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1호: 173-204.
- 박찬욱. 1992.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 의사: 제14대 총선 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153-174.
- 신두철. 2007. “5·31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캠페인.”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1호: 55-78.
- 윤천주. 1963. 『한국정치체계: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_\_\_\_\_. 1981. 『우리나라의 선거 실태: 도시화와 투표행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현출. 2004. “선거운동에서의 공평성 확보.”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1호: 221-252.
- 임성학. 2004.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개혁방안.” 『한국정당학회보』 제3권 1호: 253-277.
- 정진민. 2008. 『한국의 정당정치와 대통령제 민주주의』. 서울: 인간사랑.
- 조진만. 2006. “민주주의 공고화의 관점에서 본 정치관계법 개정의 효과: 성과와 한계에 대

- 한 경험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4집 2호: 150-185.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3호: 375-394.
- 한국정당학회. 2004. 『제17대 총선 현장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 \_\_\_\_\_. 2009. 『18대 총선 현장리포트: 18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 서울: 푸른길.
- 한정훈 · 강현구. 2008.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를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제18집 1호: 51-82.
- Abramson, Paul R., and John H. Aldric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6: 502-521.
- Buchanan, James M., and Gordon Tullock. 1962. *The Calculus of Consent: Logical Foundation of Constitutional Democracy*.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udge, Ian, Ivor Crewe, and David Fairlie, eds. 1976. *Party Identification and Beyond*. New York: Wiley.
- Button, Mark, and Kevin Mattson. 1999. “Deliberative Democracy in Practice: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Civic Deliberation.” *Polity* 31: 609-637.
- Caldeira, Gregory A., Aage R. Clausen, and Samuel C. Patterson. 1990. “Partisan Mobilization and Electoral Participation.” *Electoral Studies* 9: 191-204.
- Campbell, Angus, Philip Converse, Warren Miller, and Donald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rney, Evan. 1998. “Political Liberalism,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ublic Sphe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97-110.
- Cox, Gary W., and Michael C. Munger.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217-231.
- Dalton, Russell J., Paul Allen Beck, and Scott C. Flanagan. 1984.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ussell J. Dalton, Paul Allen Beck, and Scott C. Flanagan,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Democracies: Realignment or*

- Dealign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Ferejohn, John A., and Morris P. Fiorina.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Finkel, Steven E., and Karl-Dieter Opp. 1991.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icipation in Collective Political Action." *Journal of Politics* 53: 339-371.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ishkin, Jame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y, Mark, and Miki Caul. 2000. "Declining Voter Turnou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1950~1997."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 1091-1121.
- Gujarati, Damodar N. 1995. *Basic Econometrics*. New York: McGraw-Hill, Inc.
- Hillygus, D. Sunshine. 2005. "Campaign Effects and the Dynamics of Turnout Intention in Election 2000." *The Journal of Politics* 67: 50-68.
- Huckfeldt, Robert, and John Sprague. 1992. "Political Parties and Electoral Mobilization: Political Structure, Social Structure, and the Party Canva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 70-86.
- Jackson, Robert A. 1997. "The Mobilization of U.S. State Electorates in the 1988 and 1990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9: 520-537.
- Kernell, Samuel. 1977. "Presidential Popularity and Negative Vot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Midterm Congressional 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 44-66.
-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Rationality in Presidential Voting, 1936~196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cDonald, Michael D., and Ian Budge. 2005. *Elections, Parties, and Democracy: Confer-*

- ring the Median Mand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Donald, Michael, Silvia Mendés, and Ian Budge. 2004. "What Are Elections For? Con-  
ferring the Median Mandat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4: 1-26.
-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  
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Peltzman, Sam. 1976. "Toward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211-240.
- Pierson, James. 1975. "Presidential Popularity and Midterm Voting at Different Electoral  
Level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 683-694.
- Powell, G. Bingham. 1982. *Contemporary Democracies: Participation, Stability and Vio-  
l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0: 17-43.
- Rabinowitz, George, and Stuart Elaine Macdonald. 1989. "A Directional Theory of Vot-  
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93-121.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525-536.
- Schattschneider, E. E. 1942. *Party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Rinehart.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re, Alan. 1996.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ttenberg, Martin P. 2002. "The Decline of Party Mobilization." Russell J. Dalton and  
Martin P. Wattenberg, eds, *Parties without Partisans: Politic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ABSTRACT]

## Which Electorates Canvass for the Votes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Cho, Jinman | Inha University

It may influence on the electoral processes and outcomes a lot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ies to canvass for the votes performing by the electorates, nevertheless, it has not been properly discussed and studied at the academic sphere. Considering of the reality, this study using the survey date analyzed which factors had affected to canvass the votes performing by the electorates' in the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e model, this study revealed that political efficacy, concern for the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atisfaction with the incumbent performance, ideology, income, and education had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electoral campaigns at the electorates' level in the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elections.